
미세먼지(PM-2.5) 고농도시
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

2018. 3.

 서울특별시
(기후환경본부)

목 차

I	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효과	1
II	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필요성	3
III	추진전략 및 방향	6
IV	세부추진 계획	7
	1-1. 시민주도의 “미세먼지 나부터 실천운동” 적극 협력	7
	1-2. 시민참여 바탕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운동 전개	8
	2.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	9
	3.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실시	10
	4. 미일리지 회원 승용차 미운행 참여시 신규 인센티브 제공	11
	5.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마련 및 관리강화	12
	6. 어린이집 공기측정기 설치로 정보제공 및 적정관리	13
	7.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단속 시행	14
	8.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·외 지속적 협력 강화	15

미세먼지(PM-2.5)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

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거둔 범시민 차원의 참여와 실천이라는 긍정적 시민여론과 공감을 기반으로, '시민주도 시민참여'라는 보다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 추진

I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효과

□ 도입배경

-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, 비상시 긴급하게 배출과 노출을 줄이는 서울시 차원의 과단성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
 - 고농도 미세먼지(PM-2.5) 발생은 재난상황으로,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평상시 일상적 대책에 더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비상대책 요구
 - ▶ PM-2.5 농도 $50\mu\text{g}/\text{m}^3$ 노출시, 연간 약 3,100명의 서울시민 조기사망 발생¹⁾
 - ▶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('17.5.27), 고농도 발령시 차량2부제 실시 찬성 80%
- 환경부의 '수도권 비상저감조치'는 공공부문 위주의 비상대책으로 한계, 보다 진일보한 서울형 비상조치 필요
 - (서울형) 일반시민 :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/ 행정·공공기관 : 주차장전면폐쇄
 - (수도권) 일반시민 : 차량2부제 자율 참여/ 행정·공공기관 : 차량2부제
- 정책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인 '시민 참여'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중 교통 무료운행 등 '서울형 비상저감조치' 시행
 - 실질적 조치인 '차량 의무2부제'가 시행되어야 하나, 법적·사회적 한계로 마중물 정책인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 도입

1) 출처 : 2015년 Joshua S. Apte(University of Texas 교수)의 연구결과보고서

발령 : 3회 (1.15(월), 1.17(수), 1.18(목))

(단위 : $\mu\text{g}/\text{m}^3$)

구 분	기 준	1.14(일)	1.16(화)	1.17(수)	총족여부
I. 실측	오늘 (16시간) 미세먼지(PM-2.5) 나쁨($51\mu\text{g}/\text{m}^3$)	57 (00-16시)	85 (00-16시)	91 (00-16시)	총족
II. 예보	내일 (24시간) 미세먼지(PM-2.5) 나쁨($51\mu\text{g}/\text{m}^3$)	나쁨 (국립환경과학원 17시 예보)			총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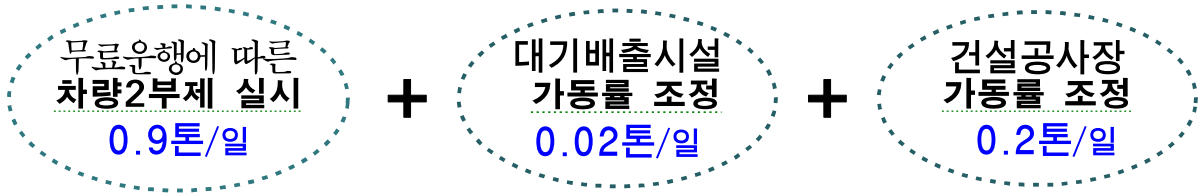
-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함께 대기정체가 지속된 상태에서 국내 생성요인이 심화되어 대기오염 악화
 - (1월15일) 중국내륙으로부터 기원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, 농도가 높아짐
 - (1월 17일,18일) 고농도 현상 중후반부터는 대기정체 상태에서 서울 및 수도권 발생요인이 크가 증가해서 발생
 - ※ 자동차, 난방 등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10배 증가

조치내용

- 비상발령시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확보
 - (행정·공공) 주차장 폐쇄 및 차량2부제(480개소), 관용차량 3만3천대 운행중단,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(12개소) 및 공사장(180개소) 조업단축
 - ※ 분진흡입 청소차량 92대 투입하여 3일간 약 1만3천km 운행, 도로먼지 저감
 - (일반 시민)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, 출·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이용 원활히 시행
 - (이행 점검) 주차장 폐쇄 및 차량게이트표시 자치구 96%, 공공기관 76% 이행
- 재난문자 등 상황 신속전파, 공기청정기 보급 등 노출저감 조치
 - (전파) 재난문자(발령당일 17:15분), 아파트 주민 안내방송 등 온·오프라인 홍보
 - (노출저감) 어린이집 공기청정기(14,270대), 민감계층 마스크 보급(101만명, 300만개)
- 시민단체·마을공동체 협력 자율캠페인 실시, 차량2부제 등 시민공감대 형성
 - (캠페인) 광화문광장 등 상징거리, 에너지 자립마을(14개소) 등 마을 거점
 - (언론, 온라인) 전문가·시민단체 언론기고(8개 언론), 시민단체 SNS 활용 안내

□ **시행효과**

- 서울지역 **PM-2.5**, 1일 배출량(34톤)의 최대 3.3%인 **1.1톤 감축** 추정²⁾



구 분	서울시 [최소~최대(평균)]	환경부 [최소~최대(평균)]
차 량 2 부 제	552~893kg/일(723kg/일)	1,217~2,005kg/일(1,610kg/일)
대기배출시설	3~15kg/일(6kg/일)	172~858kg/일(343kg/일)
건설공사장	32~213kg/일(104kg/일)	90~608kg/일(293kg/일)
총 계	587~ 1,121 kg/일(833kg/일)	1,479~3,471kg/일(2,246kg/일)

- **도로 통행량** 감소 : **0.3%**(1.15일) → **1.73%**(1.17일) → **1.70%**(1.18일)

— 대중교통이용승객 증가 : 지하철 최대 5.8%, 시내버스 최대 9.4% 증가

구 분		1월 15일(월)	1월 17일(수)	1월 18일(목)
대중교통 이용승객	지하철	3.5% 증가	4.8% 증가	5.8% 증가
	시내버스	4.0% 증가	6.7% 증가	9.4% 증가
도로 통행량		0.3% 감소	1.73% 감소	1.70% 감소

※ 시행 전주 또는 2주전 '같은 요일 대비 발령일 비교'

- **분진흡입청소차량** : 토사 470kg, 분진 45kg 저감

※ 분진흡입 제거효과 : 1대, km당 토사·분진 수거량 3.44kg/km(토사 91.2%, 분진 8.8%)

2) 감축량 추정은 '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배출량 감축 추정방법' 적용

II

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필요성

□ 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한계 및 정책전환 필요성

- 공공부문 위주의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(PM-2.5)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없는 한계 노출

- 수도권 PM-2.5 1일배출량(147톤)중 비상저감조치시 최대 감축량(3.5톤)은 전체 배출량의 2.4%에 불과함
- 1일 최대 감축량에서 차량2부제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, 대중교통 무료운행의 실질적 감축량은 미반영된 추정치로 시행효과 의미 퇴색
 - ※ 차량2부제 부문 1일 최대 감축량 비율 : 수도권 57%, 서울지역 79%

⇒ 공공·자동차중심에서 민간·다량 배출사업장 등으로 비상조치범위 확대

-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도 중요하지만, 상대적으로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는 노출저감 정책 강화 필요

-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차량2부제, 대기배출시설 및 건설공사장 조업단축 등 배출저감에 초점을 맞춰 정책 설계
-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, 의료비용 증가 등 건강위해성을 고려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대책 동시 이행

⇒ 어린이 등 민감군,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노출저감 정책 병행 필요

-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국회, 환경부, 시민(단체)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나, 향후 시민주도의 실효적 정책으로 전환 필요

- 국회·정부는 차량 의무2부제 입법촉진 및 시민동참운동 선언이 있었으나, 자율2부제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실효적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서 한계
- 최근 여론조사결과 잘한 정책(49.3%, 리얼미터)이라는 평가, 응진 코웨이 등 자율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 증가 등 긍정적 여론 형성

⇒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 확산 및 정부 협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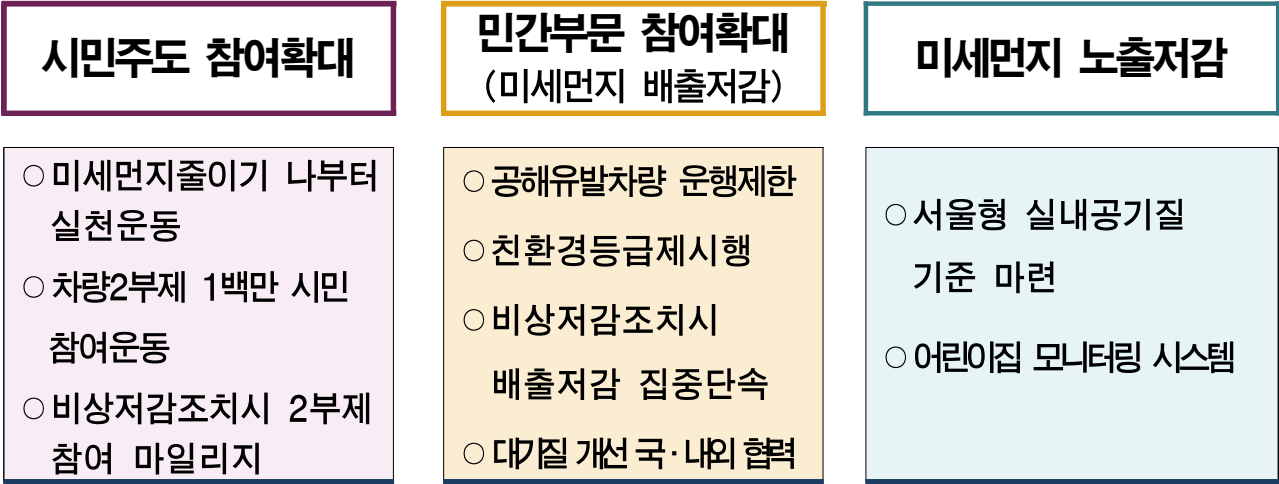
□ 시민 등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

- 학부모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 등 숙의과정 진행
 - 미세먼지 민감군인 영유아 학부모(50여명), 서울미디어메이트(20여명) 참여
 - 주요 건의내용
 - ▶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
 - ▶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야외활동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
- 전문가T/F 운영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
 - 대기질 개선 전문가T/F 구성,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방향 제안
 - 주요 권고내용
 - ▶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대응정책은 배출저감과 노출저감을 동시에 이행
 - ▶ 민간부문과 수도권, 충청지역까지 비상대응조치 범위 확대 및 시민소통 강화
-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“미세먼지 나부터” 시민사회 선언
 - ‘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, 서울시민 공동행동’ 발족(2.22일)
 - ▶ 미세먼지 줄이기 “말이 아니라 행동으로”, “혼자가 아니라 함께” 추진
 - ▶ 차량2부제 민간참여 의무화와 시민선언운동, 시민참여캠페인 전개
 - 주요 건의내용
 - ▶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공감 및 국회, 정부의 차량 의무2부제 조속 시행 촉구
 - ▶ 대중교통 무료정책의 후속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노출피해 저감대책 시행
 - ▶ 버스승강장, 지하역사 등 시민밀집 대중공간에 대한 노출피해대책 검토
-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·도, 미세먼지 공동협력 논의
 -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(1.19일),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·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수도권 공동문제로 인식하고, 공동노력
 - 환경부, 국회 「미세먼지 특별위원회」에서 서울시 정책지지(1.17일)
 - ▶ 지자체 여건에 맞게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응할 수 있는 법안개정에 긍정적 입장
 - ※ 국회,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적 강제를 위한 「미세먼지특별법」 제정과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개정 발의

Ⅲ 추진전략 및 방향

□ 추진전략

시민이 주도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실현



□ 추진방향

-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‘**시민행동**’으로의 전환으로 정책성과를 높이고, 시민동참의 마중물 역할을 다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중단(2018.2.27)
 -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운동, 시민단체 연대모임과의 협력강화, 친환경프로그램 참여시민 인센티브 확대 동참유도
- 미세먼지 배출량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, **민간부문 참여를 제도화**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
 - 차량 의무2부제 입법추구, 친환경등급제시행, 공해유발차량 운행제한, 미세먼지 집중단속 등
- 배출저감 위주의 현재 비상저감조치를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**노출저감 정책까지 시행**하는 비상대응 조치로 전환
 - 어린이집,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, 서울형 실내공기관리기준 마련

IV

세부추진 계획

1-1 시민 주도의 “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실천운동” 적극 협력 신규

◆ 미세먼지 해답은 ‘시민’에게 있으므로, 시민주도의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거버넌스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참여 활성화

- 「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, 서울시민 공동 행동」 시민참여 선언
 - 32개 시민단체 연대 「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, 서울시민 공동행동」 발족 ('18.2.22)
 - 서울환경운동연합, 녹색교통운동, 서울YWCA, 서울모범운전자연합회 등
 - 시민들이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의견수렴 및 대안 제시
 - 서울시에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저감대책 정책제안(2.22)
 - 교통량이 많아 미세먼지 노출이 심한 버스승강장,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등
 - 서울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이행상황 정보공개 요청
- 시민주도의 미세먼지 나부터 줄이기 실천캠페인 적극 협력
 - 범시민 참여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캠페인 및 인식증진 활동 전개
 - 미세먼지 바로알기,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등
 -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자율 2부제 시민참여 캠페인 공동 추진
 -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일, 대중교통 이용의날, 가스안전점검의 날 등 계기 활용
 - 차량2부제 참여 스티커부착, 플래카드, 리플렛 배부 및 퍼포먼스 등 캠페인 전개
- 국회 및 정부에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 및 제도화 촉구
 - 국회에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의무 2부제 시행토록 법제화 촉구(2.26)
 -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을 위한 시민서명운동 및 인증샷 등 추진
 - 환경부에 미세먼지 고농도시 실효적 개선대책 마련 촉구(3월 중)
 -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 및 학교실내체육관 등 정부지원사업 개선 등

◆ 시민이 함께 만들고 시민이 함께 실천하는 시민참여 실천운동 확대

□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운동 추진

○ 2부제 스티커 부착으로 실제 발령일 시민참여 확대 촉진

– 인증샷 릴레이 등으로 2부제 참여 사회적 공감대 확산



○ 참여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우선 참여 유도하고 단계별 확대 추진

– 공무원, 공공기관 직원,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, 에코마일리지 가입자(198만명), 에너지자립마을 입주자 등 우선 참여 후 일반시민으로 확대

□ 미세먼지 경각심 고취 및 즐이기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 실시

○ 차량 자율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기업 참여 선언 및 실천 캠페인 실시

– 신재생에너지, 환경 관련 기업체 선도적 참여를 통한 분위기 확산
– 함께미소 캠페인('17.10) 확대 실시 및 우수사례 전파

○ 온라인을 통한 미세먼지 정책 공유 및 소통으로 시민참여 활성화

– 미세먼지 전용 온라인플랫폼 구축으로 정보 제공,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, 정책제안·민원 등 정책 참여기능 제공
– 민간 온라인 포털(Daum)과 시민참여 공동 캠페인 추진

○ '고농도시 시민 대응요령' 안내 및 교육 강화(외출 자제,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)

–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에 대응요령을 리플렛 및 동영상 등으로 제공

□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차량 미운행·2부제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

○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차량중 미운행시 특별포인트 추가 지급(1회당 3천 포인트)

– 다각적인 집중홍보를 통해 '18년 신규 가입자(5만명) 조기 모집(※'17년 5만명 가입)

○ 민간기업 차량 2부제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 제공('18.1월부터 시행중)

– 1회 시행시 해당 건물 교통유발부담금의 0.4%(최대 5%) 경감

- ◆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 제한
- ◆ 공청회, 정부, 경기·인천 등과 충분히 협의 후 제한대상, 시행시기 확정

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요

- 근거법령 :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33조, 제34조, 제60조
- 시행절차 : 계획수립 → 공청회 → 교통위원회 심의 → 운행제한 고시 → 시행
- 운행제한 :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일 06시~21시 까지
- 대상차량(안) : '05.12월 이전 등록, 2.5톤 이상 경유차 등 공해유발 차량
- 제한지역 : 서울특별시 전 지역
- 과 태 료 : 10만원(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)
- 단속방안 :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(37개 지점)에 공해차량 DB구축 후 체계적 단속, 인력에 의한 단속 병행

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및 시민·관계기관 협의 추진

-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추가설치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추진('18.3~10월)
 - 시스템 14개지점, 카메라 20대 추가설치(누계 : 시스템 51개지점, 카메라 100대)
 - 타 시스템 연계로 데이터 자동추출 및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등 고도화
- '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' 공청회 개최계획('18.3월)
 - 참석대상 : 일반시민, 시민단체, 전문가, 유관기관 및 단체 등
 - 주요내용 :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필요성 및 세부 시행방안 논의
- 정부(환경부, 국토부), 경기·인천 등 협의 추진('18.3월~)
 - 등급제 고시(환경부) 및 자동차등록부 등급기재(국토부) 등 제도적 기반 마련
 - 수도권 '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(LEZ)' 시행협약('16.8월) 확대·발전 방안 협의 및 수도권 공해차량 정보 공유 등

3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실시 강화

- ◆ 친환경차량에 대한 선택권 확대로 시장에서 공해유발차량 배제토록 유도
- ◆ 친환경차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친환경 인식확대 및 시민 참여운동 확산

전국 최초 자동차 **배출가스 친환경등급 고시** 및 시행 안내

-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배출등급 고시 개정('18.4월중)
 - 환경부 용역 완료('17.12) → 공청회('18.3) → 등급고시('18.4)
 - ※ 대기오염물질(HC, CO, NO_x, PM) 배출기여도를 고려하여 7등급 분류

자발적인 **라벨링 부착**을 통한 공해유발차량 단계적 배제

- 시민단체 등 협력을 통한 '**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 실시** 및 홍보(7월~)
 - 제도소개, 내차 등급확인, 인센티브 등 대형전광판, 홈페이지, SNS 등 활용 홍보
- 친환경등급제 확정고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/페널티 기준 재정립
 - 공영주차장 50% 감면: 저공해자동차(0~1등급), 혼잡통행료: 0등급(면제), 1등급(50% 감면)
- 친환경등급 라벨을 부착하여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 전국차량 우선 적용
 - 제작차는 출고시점, 운행차는 자동차 종합검사시 등급라벨 부착

녹색교통진흥지역 내 **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**

- 지속가능한 도심 맞춤형 '**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**' 수립('18.2.)
 - 녹색교통 중심 도로 공간 재편, 수요관리,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
- 서울연구원과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공동연구 추진('18.3~12)
 - 파리 등 주요도시 등급제 사례조사, 등급라벨 표기사항, 기대효과 산정 등
-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 **운행제한단속시스템** 설치 및 시범운영('18.12.)
 - 7개지점 우선설치 : 돈의문, 남소문, 소의문, 광희문 등 한양도성 진입로
 -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전 단속시스템(7개소)과 PDA, 카메라활용 인력단속 병행
- 한양도성 '**녹색교통진흥지역**'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운영('19년)
 -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(43개 지점), 친환경 하위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

4 마일리지 회원 승용차 미운행 참여시 신규 인센티브 제공 신규

- ◆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,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마일리지 회원에 대해 신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행차량의 실질적인 감축 도모

승용차 마일리지제 운영현황

- 회원가입 : '18년까지 회원 10만명 모집
 - '17년까지 5만여명 가입완료, '18년 신규 5만명 가입 추진
- 참여혜택 :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·감축률에 따라 2~7만원 지급

감축률/ 감축량	5~10%미만 0.5~1천km미만	10~20%미만 1~2천km미만	20~30%미만 2~3천km미만	30%이상 3천km이상
인센티브	2만원	3만원	5만원	7만원

- 인센티브 지급 : 모바일상품권, 지방세납부,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

「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」 신규 도입 ('18.2.27~)

- 연간 주행거리 감축 회원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에 추가하여 **비상저감조치 발령일, 자동차 미운행한 회원에게 심사를 거쳐 마일리지 지급**(1회 참여당 3,000포인트)
 -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(D-1) 차량운행 종료후 및 발령시행일(D+1) 차량운행 개시전 번호판·계기판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市에서 차량 운행여부 확인
- 비상저감조치 발령전, **기 확보된 가입회원 메일을 활용하여 차량운행 자제 호소문 발송** 및 차량 미운행시 **추가 인센티브 지원내용 상세 안내**
 - ※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도 참여안내 문자 발송, 차량 미운행 재차 유도
- 미세먼지 저감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여 실질적인 차량운행 감축효과 확대 기대

- ◆ 어린이집,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
- ◆ 실내공기질을 적정관리, 시민 신뢰도·만족도 제고 및 정부대책마련 협의

□ 현 실태

- 미세먼지 민감군인 어린이집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우려 증대 (※ 시민단체(미대축), 타운홀 미팅, 언론기관 등)
 -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유지기준 위주로 실질적 시민건강 보호에 미흡하고, 유지기준에 초미세먼지(PM-2.5) 미포함
 - ※ PM-2.5 기준: (한국) 실내기준 없음 : (해외) WHO 10 $\mu\text{g}/\text{m}^3$, 미국 15 $\mu\text{g}/\text{m}^3$, 독일 25 $\mu\text{g}/\text{m}^3$
- ⇒ 국제기준에 걸맞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재설정하여 시설유형별 단계적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마련 필요

□ 추진대책

- 시민 눈높이에 맞는 「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」을 새롭게 마련(18.9) **신규**
 - 전문기관 용역(18.2~9월)을 통한 시설별 오염실태·원인분석, 건강영향 분석을 통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재설정 및 실효성 확보
 -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중인 어린이·노인시설 및 지하철 역사, 지하철 객실 내 등 대중교통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우선 추진

현황조사 (2~5월)
시설군별 대기질 영향분석,
빅데이터 수집 등

유지기준 마련
(5~9월)
서울형 관리기준

시민토론회(8월)
시설관리자, 시민
전문가 등 의견수렴

조례개정
(10~12월)
市 환경기본조례

-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추진
 -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 지정·관리(습식기계청소기 도입 54대,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99개소 구축 등), 전동차량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(150량) 등
-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

- ◆ 영유아 학부모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의 관리 문제 개선
- ◆ 공기측정기 설치를 통한 미래세대 ‘보육환경의 안심과 안전’에 방점

□ 사업개요

- 대상 : 서울소재 전체 어린이집 6,226개소
 - － 국·공립 1,270개소, 민간 4,956개소
- 설치방법 : 전체 어린이집에 간이 측정시스템 설치
- 측정 및 공개내용 : 실내 관측기능 7개 정보 및 통합지수
 - － 미세먼지(PM-10, PM-2.5), 소음, 이산화탄소,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, 온도, 습도
- 설치시기 : '18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및 보급
- 소요예산 : 20억원(기후변화기금 활용)



< 스마트폰 앱 >

□ 추진계획

- IoT 기반 간이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기질 적정관리 상시 모니터링
 - － 연 1회 측정·관리 의무를 상시적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 사각지대 보완
 - ※ 법정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(430㎡이상의 어린이집)은 791개소(12.7%)
 - － 국·공립시설에 우선설치하고,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·추진
- 측정 정보를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, 보육교사에게 제공하여 실내공기 환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등 적정 공기질 관리
 - － 기준 초과시 경보 알림.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
 - － IoT 기반으로 공기측정기와 환기설비 및 청정기 자동연계 제어기능 보장

- ◆ 미세먼지 저감 시민인식 제고,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회원과 합동단속
- ◆ 오염물질 배출사업장·차량 및 주차장 폐쇄기관 주변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

□ 집중단속 추진개요

- 단속대상 : 교통·생활 등 2개 분야

- ▶ 교 통(2) : 운행차 배출가스·공회전 특별단속, 불법 주·정차 특별단속
- ▶ 생 활(2) :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, VOCs 발생사업장 특별단속

- 집중단속반 구성 : 환경분야(총 61개반, 159명), 불법 주·정차(시·자치구 1,557명)
 - 시민단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, 생활분야 미세먼지 합동점검·단속
- 단속시점 :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일 09:00 ~ 해제시 까지

□ 분야별 추진계획

- ① 운행차 배출가스·공회전 특별단속 : 市 친환경기동반 6개반, 자치구 25개반
 - 市 : 도심 4대문안, 고궁, 관광버스 주차구역, 유동인구 많은 지역 등 집중단속
 - 자치구 : 터미널, 대형화물차 많은 시장·주차장, 학교주변 등 순회 단속
- ②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단속 : 市 5개반, 자치구 25개반
 - 市 : 재개발·재건축 사업장(83개소)중 굴토 작업중인 사업장(31개소)
 - 자치구 : 특별점검대상(1만㎡ 이상) 사업장중 市 단속대상을 제외한 사업장 (408개소) 순회 단속
- ③ 휘발성 유기화합물(VOCs) 사업장 특별단속 : 비산먼지 단속과 병행
 - VOCs 배출시설 575개소중 대형 주유소, 제조시설 등 배출규모 및 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단속대상 선정·추진
- ④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: 市(4개 지역대 652명), 자치구(695명)
 - 비상저감조치 발령후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

- ◆ 수도권 및 타지자체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동북아 주요도시간 대외협력 강화 및 대기오염 감축사업 적극 추진

- **환경부와 수도권 3개시도가 함께 비상저감조치 실효적 개선 협력**(3월~)
 - 미세먼지 특별법, 대기환경보전법령 조속한 제정(개정) 정부협력 및 촉구
 - 국회계류중인 「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조속 통과 협력
 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과 「동법 시행규칙」 빠른시일 내에 개정토록 촉구
 - ※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및 차량2부제 등 조치사항 자치단체장 권한 명시
 -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추가 개선방안 논의 등 비상저감대책 공동협력 추진
 - 차량운행제한 제도 확대방안, 대중교통 이용자 추가인센티브 지급방안 등
 - ※ 대중교통 지하철 실내공기질 관리강화, 대중교통운행시간 연장,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
- **「수도권 정책협의회」를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협력 강화**(3월~)
 - 「지자체(서울·인천·경기) 정책협의」를 통한 대기개선 협력 강화
 - 공해유발차량 운행제한 지역(LEZ) 확대 및 저공해 미조치 차량 등 정보공유
 -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공동 추진 등 수도권 대기개선 제도개선 공동 협력
 - 자치단체 환경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이양 요청
 - 서울 : 차량의무2부제, 경기 : 중소기업 대기배출사업장 조업 단축
 - 인천 :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, 항만·공항 대책 등
- **대기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한 동북아 등 국제공조 강화**
 - 서울 - 베이징 통합위원회 개최시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 협의(3월)
 - 서울시-베이징시간 기후·환경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추진(3.19일)
 - 동북아 주요도시 간 「제8차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」 개최(9월)
 - 동북아 주요 도시 간 대기질 정책 공유 및 협력, UNFCCC, CCAC 등 참여확대
 - ‘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’ 운영을 통한 도시 간 협력 추진
 - 베이징·도쿄 등 9개도시, 보건환경연구원 등 8개기관 참여 워크숍 개최(5월, 9월)